

한·미 정상 “북미회담 최선”

문 대통령 “北 정상회담 의지 의심할 필요 없어

북미간 구체적 비핵화 방법론·北 체제 안정 협의 필요 한미연합훈련 종료 25일 이후 남북대화 재개 관측”

靑 “트럼프, 북미회담 성공 개최에 이견 없어”

다음달 12일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이 22일(현지시간) 마무리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통역만 배석한 채 20분간 단독회담을 진행했으며 이어 확대회담을 가졌다. 확대회담은 양측 수석외교관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오찬을 겸해 열렸다.

문 수석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 현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다음달 12일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지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두 정상은 최근 북한이 보인 한미 양국에 대한 태도를 평가하고, 북한이 처음으로 완전 비핵화를 천명한 뒤 가질 수 있는 체제 불안감의 해소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의지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미간 구체적 비핵화 방법론과 북한 체제 안정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한미연합군사 훈련이 끝나는 오는 25일 이후 남북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대화재개가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두 정상은 남북이 연내 추진기로 합의한 종전선언을 북미 정상회담 이후 3국이 함께 선언하는 방안에 의견도 교환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현지 프레스 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이 안 열려도 괜찮다”고 표현한 것 관련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관점이지,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란 의견이 전혀 아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열리도록 하자는 데에 전혀 이견이 없다”며 “서로 보는 관점이 조금은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만 그 것은 평가란 점에 유념해 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종전선언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종전선언 단계에서 남북이중 4자의 이야기가 나온 것은 아니다. 다만 여러 가지 평가의 과정에서 언급이 된 적은 있다”며 “그 부분이 어

떤 식의 어떤 결론이고, 어떤 판단이라고 결론을 낸 바는 없다. 의견 교환들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남북 대화 재개 시점을 관측한 것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다. 다만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문 대통령은 오는 25일 이후에 지금 교착상태에 있는 여러 부분들이 풀려나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한미 정상이 논의한 북한의 체제 불안감 해소 방안” 물음에는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북한이 갖고 있는 불안감이란 것은 결국은 체제 보장에 대한 부분일 수밖에 없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비핵화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체제 보장과 안정 부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북한의 체제 보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후속 질문에는 “지금 이 시점에서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뉴시스

靑 “대통령 개헌안 철회 계획 없다”

청와대는 23일 야권의 대통령 개헌안 철회 요구에 철회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그 문제를 논의할 상황이 아니다. 국회의 몫이다. 입장 변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청와대는 한미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이슈로 대통령 개헌안 철회 여부를 논의할 여건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날 새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마친 문 대통령은 오는 24일 새벽 귀국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26일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중에 전자결재로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했다. 헌법에 따

면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오는 24일은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지 60일째 되는 날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헌법에 따라 24일 본회의 표결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안이 처리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통과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

야당은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에 계류되거나 폐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철회하지 않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 개헌안이 표류하게 되면 여권은 야당에 개헌 무산 책임론을 제기할 수 있다. /뉴시스

김광수 의원, 헌법개정 특위 위원 선임

“개헌·선거제도 개혁, 촛불시민 혁명 완성 위한 소망”



민주당과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위(이하 ‘헌정특위’) 간사로 활동 중인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돼 23일 밝혔다.

민주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 지난 2일 공식 출범함에 따라 올해 1월 출범한 국회 헌정특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과 함께 협상태이블에 서게 됐다.

이에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국무총리 추천, 대통령 권한 분산 등 권력구조 개편 문제와 협정 승자독식 소선거구제를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의식 배분에 정확히 반영되는 ‘민심그대로 선거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의 개혁, 지역균형발전·지방분권강화 등에 대해 의견이 적극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광수 의원은 “지난 2014년 기초의원 선거에서 당선자 총 3,224명 중 거대 양당 소속이 아닌 정당 소속 당선자는 48명으로 1.5%에 불과했다”며 “1·2당 공천을 받으면 살인자도 당선되고 공천 못 받으면 공자남도 낙선”이라는 말이 빈말이 아님이 확인됐다”고 현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

다.

이어 “30여 년 만에 개헌 기회가 찾아왔지만, 지금까지 국회 헌정특위의 교섭단체 여·야 3당은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만을 내세워 집점을 찾지 못한 채 난항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촛불시민혁명 완성을 위한 시대적 소명이자 20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만큼 난관으로 봉착한 개헌 논의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기초·광역의원을 두루 거친 국회의원으로서 현재 민주당과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위 간사를 맡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을 전제한 지방분권 개헌과 선거구제 개혁에 대한 의제를 중심으로 개헌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가고 있다.

아울러 3차례에 걸쳐 개헌추진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촛불시민혁명 완성을 위한 개헌열차가 재가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한편, 김광수 의원을 비롯한 야3당은 오늘(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헌법개정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좌초되어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대통령께서 제안한 개헌안을 철회해주시길”을 요청했으며, 개헌안 철회를 바탕으로 초당적인 합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총의를 모아 개헌을 해낼 것을 다짐했다. /김진성 기자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9주기

정세균 국회의장 “남은 이들 믿고 고이 쉬시라”

김해 봉하마을서 열린 추도식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9주기인 23일 “이곳에는 당신이 깨워준 우리가 있다. 남아있는 이들을 믿고 고이 쉬시라”고 추도했다.

정 의장은 이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에서 열린 추도식에 참석해 “당신의 열정, 당신의 사자후가 사무치게 그립다. 그러나 당신을 다시 깨우지는 않았다. 대통령의 영원한 안식과 여사를 비롯한 유가족 여러분의 평안을 기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당신께서 우리 곁을 떠난 지 어느덧 아홉 해가 흘렀지만 이곳 봉하의 봄은 여전히 푸르지만 하다”며 “사람 사는 세상, 살맛나는 세상의 문은 활짝 열렸지만 그 기쁨만큼이나 당신의 빈자리가 아쉽기만 하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굵게 패인 주름 속에 빛나던 넉넉한 미소, 탁주처럼 걸쭉한 당신의 소탈한 목소리가 참으로 그리운 오늘이다”며 “우리는 기억한다. 소외된 이들과 함께 호흡한 인권변호사 노무현, 불의와 반칙에 타협하지 않은 정치인 노무현, 국민을 귀하게 여기고 권력을 탐하지 않았던 대통령 노무현. 구시대와 막내가 아니라 새 시대의 밑거름이 된 당신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역시 또한 당신을 기억할 것”이라고 추도했다.

정 의장은 “우리는 2002년 12월19일, 그날의 감격을 결코 잊을 수 없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시민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생시킨 날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난해 5월9일, 촛불의 힘으로 다시 새 정부가 탄생했다”며 “당신이 꿈꿨던 사람 사는 세



사진속 노무현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9주기인 23일 오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추모관을 찾은 시민이 사진을 바라보고 있다.

상, 반칙과 특권이 없는 정의로운 나라가 시민의 힘으로 다시 세워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우리는 지역주의의 강고한 벽이 허물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 물결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여기 당신이 고향을 시작으로 제2, 제3의 노무현이 당신의 꿈을 이어나갈 것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정 의장은 “지금 한반도에는 평화

의 봄기운이 넘실대고 있다”며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한반도의 봄은 70년 세월이 만들어낸 반목과 갈등의 빙하를 녹이고 평화와 번영의 꽃을 기어코 피워낼 것이다. 어떤 가치도 평화 위에 두지 않겠다는 당신의 말씀 깊이 간직하고 실현해 나가겠다. 우리가 가야할 길이 멀고 험난할지라도 다시는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고 당

신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힘 없이 전진하겠다”며 “당신의 뜻을 받들고, 다듬고, 이어나가는 일은 이제 남은 우리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아울러 “부디 시민의 힘으로 열어나갈 대한민국의 새로운 내일을 지켜봐 달라. 지역주의와 냉전의 벽을 허물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명박 정권의 정치적 탄압에 의해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고인의 서거를 깊이 애도한다”며 명복을 빌었다. 그는 “이제 노 전 대통령을 정신적으로 계승한 문재인 대통령이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가시화하고 있다”며 “노 전 대통령은 10·4 공동선언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민주당과 청와대를 향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을 진정으로 이어가길 원한다면 불법과 특권의식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자유한국당은 노 전 대통령 9주기를 추모하는 성명을 따로 발표하지 않았다. /뉴시스

여야 3당, 盧 전 대통령 서거 9주기 추모

〈민주·평화·정의〉

민주 “10·4 선언, 한반도 평화 기틀 마련”

평화 “차별·반칙 없는 새 세상 이어가야”

정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가시화”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국회의원들은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9주기를 추모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브리핑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경제협력에 넘어 문화, 체육 등 폭넓은 상호 협력 방안을 담은 10·4 남북공동선언은 판문점 선언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며 “10·4 선언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남북관계뿐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염원하던 ‘사람 사는 세상’, ‘상식이 통하는 사회’,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은 모두가 함께 꾸는 꿈이 됐고 가야 할 길이 됐다”며 “노무현의 가치와 정신을 이어받아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민주평화당은 노 전 대통령의 차별과 반칙 없는 새 세상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정숙 대변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지는 것은 적폐 청산, 국가 대개혁을 향한 길이 아직도 멀고 험하고 특히 협치와 소통이 실종된 암울한 정치 현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변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9주기를 맞아 우리 모두 노무현 정신으로 국가 대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정치권도 협치와 소통으로 화

김관영 의원, 무기한 청와대 시위 돌입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기동 중단 계속, 한국GM 군산 공장 대책 부재로 지역경제가 망가져도 내물일 위기에 처한 군산을 지역구로 하는 국회 김관영 의원이 무기한 청와대 시위에 돌입했다.

22일 본격적인 출근시간이 시작되자 전부터 조선소 재가동과 한국GM 군산 공장 폐쇄에 따른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팻말을 들고 청와대 사랑채 앞에 김관영 의원이 등장했다.

지난주 극적으로 타결된 정부 추경심사에서 국회 예결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로 참여해 당초 예산 대비 약 84%나 증액된 1,063억원을 확보한데 이어 본격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결정이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1년 전 군산 현대 조선소를 살리겠다는 군산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면서 “한국 GM에 그 많은 국민 세금을 쏟아부으며 부형, 창원 공장만 살리고 왜 군산공장은 폐쇄하고 나몰라라 하느냐”며 강하게 항의했다.

실제로 지난 10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GM본사가 한국GM에 빌려준 차입금 3조원을 출자전환하고 산업은행이 8천억원을 한국GM에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어 18일에는 한국GM과 산업은행이 한국GM 정상화 방안을 확정 짓는 본 계약서를 체결했는데, 양측은 시간과 장소를 외부에 알리지 않고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도 비밀에 부쳐 부실실사에 이은 졸속협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군산시민은 문재인 후보에게 63.6%라는 높은 지지를 보냈지만 이런 전폭적 지지와 뜨거운 믿음을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며 “군산 없이 전북 없고, 전북 없이 대한민국 없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응답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행안부, 자자체에 추경안 신속 편성·집행 요청

행정안전부(행안부)는 2018년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의결에 따라 23일 시·도·시·군·구 부단체장 영성회의를 열었다.

행안부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산업유기지역 지원을 위한 정부의 추경예산안을 설명하고 정부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신속한 사업추진과 추경안 편성·집행을

요청했다.

특히 이번 추경에 반영된 행안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831억원), ‘고향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60억원), ‘희망근로 지원 사업’(122억원)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약 1만2000개의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줄 것을 당부했다. /뉴시스